

# 일본의 2013년 경제 그리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김명중 (일본 닛세이키초연구소 연구원)

## ■ 머리말

2012년말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나고 아베를 수상으로 하는 자민 · 공명 연합내각이 발족하였다. 새롭게 탄생한 아베 내각은 신속하고 대담한 양적완화정책 등을 추진하며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긴급경제대책의 핵심 중 한 가지가 경제성장 2%의 달성과 이에 따른 '60만 명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창출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다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아 향후 일본경제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감소하고, 유효구인배율이 개선되는 등 수치상으로는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렌고(연합:連合) 회장과 게이단렌(경단련:經團連) 회장의 회동을 시작으로 2013년 춘투(춘계임금교섭)가 시작되었다. 이번 춘투에서 렌고는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정기승급의 확보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액 1%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게이단렌은 정기승급을 연기하거나 동결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벌써부터 양자 간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글은 이상에서 간략히 설명한 일본의 경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현상과 향후 전망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내용이 최근의 일본경제와 노동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일본경제 전망

### 아베정권이 긴급경제대책을 책정

2012년도의 일본경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에 대한 수요와 정책효과에 의해 여름 이후 조금씩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외경제의 감속과 엔고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의 감소에 의해 경기회복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년 12월 16일 총선거에 의해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되었고, 12월 26일에 제2차 아베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베수상은 자민당 총재 취임 시부터 분배에 중점을 둔 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운영방침을 주장하였으며, 정권 발족 이후 대담한 금융완화, 적극적인 재정지출, 성장전략을 내세우며 장기화된 디플레이션과 최근의 엔고현상에서 탈피하여 일본경제를 재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베정권은 ‘강한 일본경제의 재생’을 목표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부활시킨 것 이외에 미시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신설하였고, 그 밑에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하였다. 일본경제재생본부는 첫 번째 임무로 사업규모 20.2조 엔(국비 10.3조 엔)의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책정하였는데, 그 개요는 <표 1>과 같다.

이 중 국비의 내역은 ① 복구 및 방재대책에 3.8조 엔, ②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에 3.1조 엔, ③ 생활의 안심 및 지역활성화정책에 3.1조 엔(공공사업에 대한 지방의 부담금을 보전하는 교부금 1.4조 엔 포함), 공공사업 등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0.3조 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경제대책에 의한 인재육성 및 고용대책은, 어려운 고용정세를 고려하여 실업자가 성장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용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직업훈련 촉진

〈표 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의 개요

(단위:조 엔)

		국비	사업규모
1. 복구 및 방재대책 (3.8조 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복구 가속	1.6	1.7
	사전 방재(인프라 노후화 방재대책, 학교 및 의료복지시설의 내수화 등)	2.2	3.8
2.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3.1조 엔)	민간투자의 환기에 의한 성장력 강화(환경투자, 연구개발, 공항 등 인프라 정비촉진 등)	1.8	3.2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 농림수산업대책(창업 및 자금조정 지원 등)	0.9	8.5
	일본기업의 해외전개지원 등(해외전개지원출자시설 창설 등)	0.1	0.3
	인재육성 및 고용대책(교육시설정비, 훈련조성금 등)	0.3	0.3
3. 생활의 안심 및 지역활성화 (3.1조 엔)	생활의 안심(70~74세 의료비 자기부담 억제, 도로 무전주화 추진, 사이버 시큐리티 강화 등)	0.8	0.9
	지역활성화(관광진흥, 공공교통정비, 지역건설기업지원 등)	0.9	1.2
	지방의 자금조달에 대한 배려	1.4	
공공사업 등의 국고채무부담행위		0.3	0.3
전 체		10.3	20.2

자료: 「日本經濟再生に向けた緊急經濟対策」, 2013년 1월 11일.

등에 의한 인재육성 등의 강화, 여성의 활용촉진, 교육재생의 추진을 위한 학교교육기반 정비 등과 관련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재육성 및 고용대책의 주된 내용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 대학 등 교육연구기반의 정비:대학, 고등전문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 정비 등(문부과학성)
- 기업지원과 일체화된 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기업지원형 고용창출사업(가칭)을 창설(후생노동성)
- 일본재생인재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사정으로 이직한 자를 정사원으로 고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 대한 조성내용을 확충(예산 조치 이외, 후생노동성)
- 청년층 인재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비정규직 청년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와 훈련수강자가 정규직으로 정착한 경우에 조성하는 청년층인재육성 및 정착 지원장려금(가칭)을 창설함과 동시에 ‘지역청년층 서포트 스테이션사업’을 확충(후생노동성)
-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문부과학성)

- 기업에 의한 고용 및 노동분배(급여 등 지급)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조치(세제, 경제산업성)

## 일본경제의 향후 전망

아베정권의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에 의해 엔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해져 수출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행의 단기관측(2012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성과를 예상하는 데 전제가 되는 달러에 대한 엔의 상정 환율은 78.9엔으로, 현재의 달러에 대한 엔의 가치는 기준환율보다 10엔 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따라서 엔화 가치 하락에 의한 효과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의 거시경제모델 시뮬레이션은, 2013년도의 엔/달러 환율이 '1달러 = 90엔'을 유지할 경우, 동 년도의 기업수익과 실질GDP는 각각 2.6%, 0.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한국 원에 대한 엔저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전자, 철강업계 등의 경우 엔저, 원고현상이 지금까지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2013년도 전반기의 일본경제는 긴급경제대책에 의한 공공투자의 증가와 엔저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 그리고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당분간은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아베정권의 경기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노다 전 수상이 중의원 해산을 시사한 2012년 12월 14일 이후, 엔 시세는 크게 하락한 반면, 주가는 기업수익의 개선 및 경기대책에 의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일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월 28일 임시각료회의에서 정부에 의해 승인된 2013년도 경제전망은, 2013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국내총생산(GDP)의 실질성장률은 2.5%로 예상되고 있으며, 긴급경제대책과 금융완화의 강화가 경기와 물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3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공공사업의 영향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3.5% 증가하는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여, 완전실업률은 3.9%로 전년도보다 0.3%포인트 개선되고 고용과 소득의 개선을 배경으로 개인소비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일본의 노동시장의 현상과 전망

### 일본 노동시장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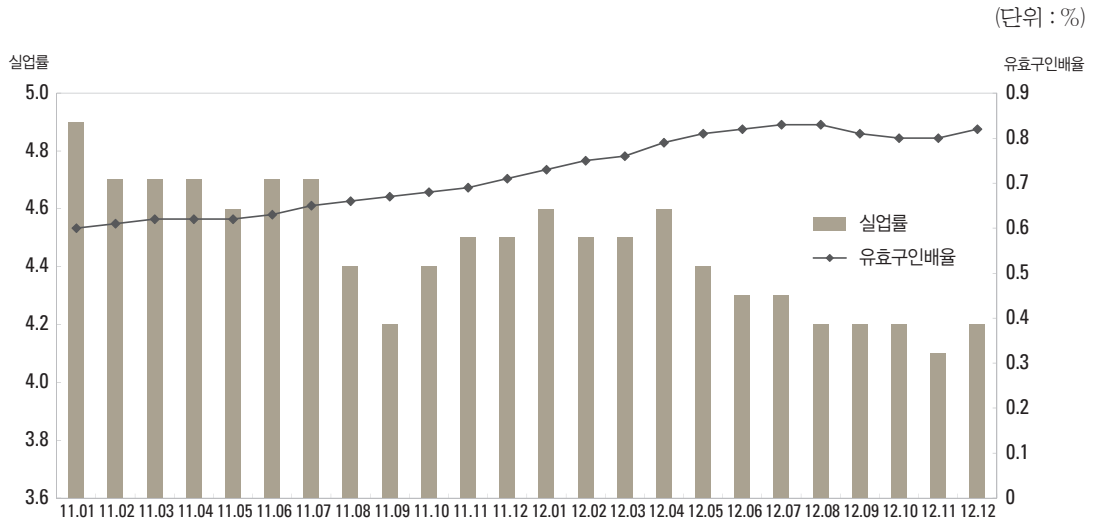
일본 총무성이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12년 12월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4만 명이나 감소한 6,486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피크시의 6,811만 명(1997년 6월)보다 325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3,763만 명으로 전년동월의 3,790만 명보다 27만 명이나 감소한 데에 비해, 여성은 2,774만 명으로 전년동월의 2,757만 명보다 17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남녀별 경제활동인구를 시계열로 보면 남성경제활동인구는 피크시의 4,040만 명(1997년 6월, 1999년 1월)에 비해 277만 명이나 감소한 데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피크시의 2,787만 명(2001년 2월, 2007년 12월, 2010년 10월)에 비해 13만 명 감소하는 데에 그쳐 노동인구의 감소는 남성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2011년의 59.3%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피크시의 70.8%(1955년)와 비교하면 11.7%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이다.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의 진행 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2012년 12월의 완전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의 4.5%보다 개선되었으며, 유효구인배율도 0.82로 전년동월의 0.71을 상회하였다(그림 1 참조).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의 동향만을 보면 일본의 노동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의 내실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축소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상기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97년 6월에 6,584만 명으로 피크에 달했던 취업자 수는 2012년 12월에는 6,256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고용자 수는 5,490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8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취업자 수 동향의 특징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그림 1] 최근 일본의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의 동향



자료 :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노동력조사」를 참고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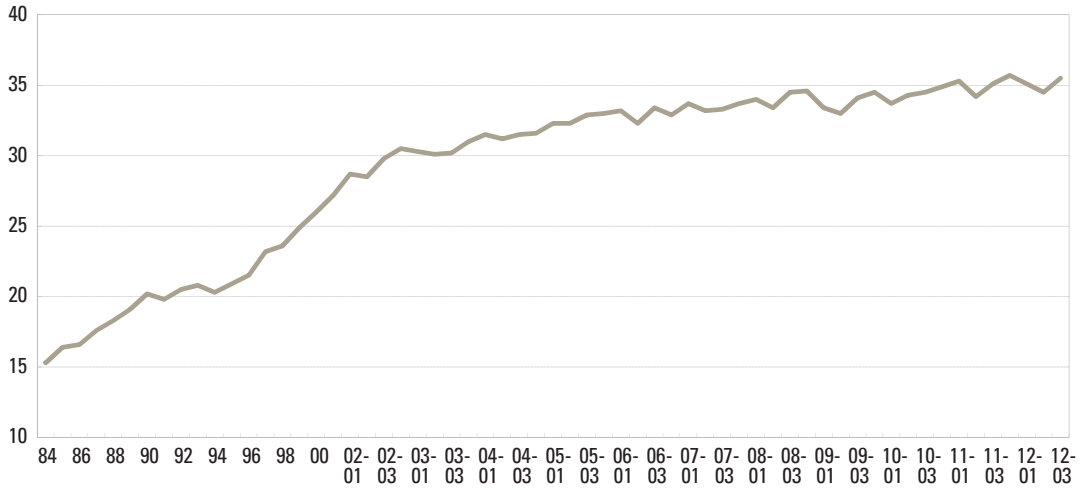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신규졸업 및 기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프리터 및 청년층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의 질의 저하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1984년의 15.3%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3분기에는 35.5%까지 상승하였다(그림 2 참조). 또한 신규취업자의 이직률도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과 [그림 4]는 고졸 및 대졸 신규취업자의 이직률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의 고졸 신규취업자와 대졸 신규취업자의 1년 차 이직률은 각각 20.8%와 14.3%로 2010년의 19.5%와 12.5%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노동력수급의 미스매치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호 및 음식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및 처우수준이 낮은 점을 이유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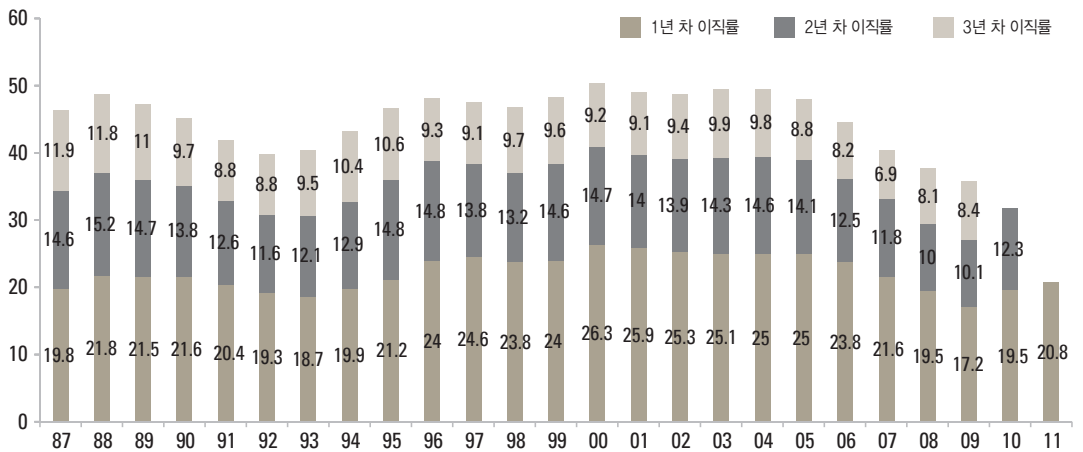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노동력조사」를 참고로 필자 작성.

[그림 3] 신규취업자 재직기간별 이직률의 동향(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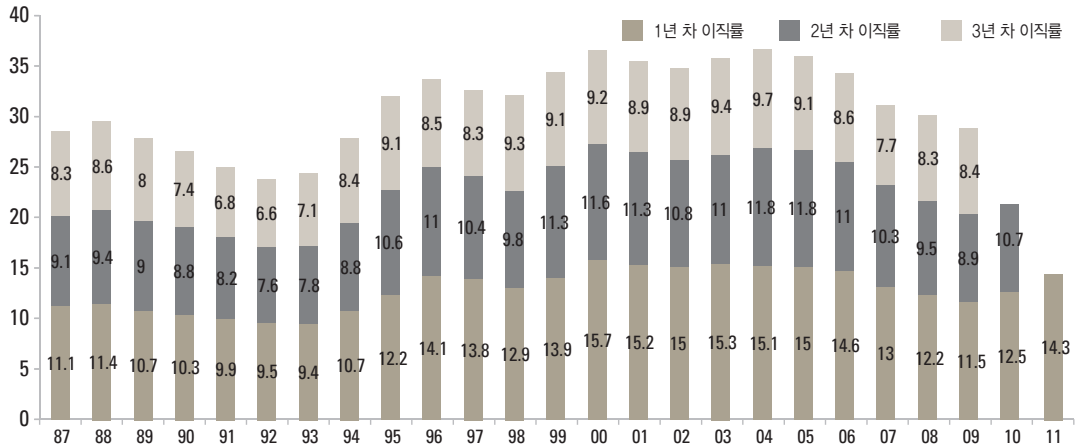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新規学卒就職者の在職期間別離職率の推移」를 참고로 필자 작성.

[그림 4] 신규취업자 재직기간별 이직률의 동향(대졸)

(단위 : %)



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新規学卒就職者の在職期間別離職率の推移」를 참고로 필자 작성.

## 일본정부의 긴급경제대책과 고용창출

일본정부가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의 핵심 중 한 가지가 ‘60만 명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완전실업률을 약 1% 끌어 내리는 게 목표이지만,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의 고용과급효과 자체에 대해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60만 명 고용은 2013년도 실질성장률이 약 2% 높아진다는 전제하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액을 기존의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계산식에 넣어 고용 확대에 대한 예상을 기계적으로 산출한 수치이다.

일본정부가 성장률 2%에 근거하여 고용과급효과를 계산하고 있는 데에 비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성장률을 0.5~0.8% 사이로 예상해 고용과급효과를 계산하고 있어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의 키노시타 토모오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2% 예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2% 달성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로 건설업의 인재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당시 민주당 정권이 거액의 복구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건설업 분야에는 구인이 급증하였



다. 하지만 저출산 등의 영향 등으로 현장에서는 노동력을 충원하지 못해 예산이 원활히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을 책정한 공공사업이 모두 실시될 것으로 전망해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BNP 파riba 증권외 코노 료타로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상태에서 새롭게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쿠마노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커다란 과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사례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2012년 12월에 경제성장률을 1.1%로 예상하였다가 최근 들어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경제대책에 공공사업이 추가된 점을 평가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2013년도의 실질공공투자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채용전망

본 절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노동문제연구소인 리쿠르트워크 연구소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채용전망조사」<sup>1)</sup>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쿠르트워크연구소가 실시한 채용전망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채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리쿠르트워크연구소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종업원 규모 5인 이상의 민간기업 7,333사를 대상으로 신규 및 중도채용에 대한 구인동향을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4년에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신규채용 전망에 대해 ‘증가’라고 응답한 기업이 10.3%인 데 비해, ‘감소’라고 응답한 기업은 6.9%에 그쳐, 2013년에 이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전년 조사의 25.1%보다 조금 증가한 25.8%로 조사되어, 신규채용시장은 향후 경기동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를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모두 ‘증

1) リクルートワークス研究所(2012), 「ワークス採用見通し調査(新卒:2014年度 中卒:2013年度)」.

〈표 2〉 채용전망의 동향

	증가	변동 없음	감소	모르겠다	과거에도 향후에도 채용 예정 없음	무응답	증가감소
2014년 졸업예정자	10.3	47.6	6.9	25.8	9.2	0.2	3.4
2013년 졸업예정자	10.4	50.0	6.4	25.1	7.9	0.1	4.0
2012년 졸업예정자	9.3	47.1	7.5	28.6	7.5	0.1	1.8
2011년 졸업예정자	5.5	40.1	9.3	36.6	8.3	0.1	-3.8
2010년 졸업예정자	8.3	50.6	15.7	25.1		0.3	-7.4
2009년 졸업예정자	18.0	54.9	6.8	19.9		0.4	11.2
2008년 졸업예정자	22.7	46.4	6.9	21.4		2.7	15.8

자료: 리크루트워크스연구소(2012), 「워크스採用見通し調査(新卒:2014年度 中度:2013年度)」.

가'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감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상회하였다. 또한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모두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2013년 졸업자의 채용상황과 '변동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0명 미만의 기업이 25.8%, 1,000명 이상의 기업이 24.7%에 달하였다.

2014년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만 '감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증가'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업종에서는 '증가' 할 것이라는 응답이 '감소' 할 것이라는 응답을 상회하였다. 2014년 졸업자의 신규 채용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한 업종은 음식서비스업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매업(16.7%), 정보통신업(14.8%)의 순이었다.

2013년도의 중도채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다(7.5%)라는 응답이 감소할 것이다(5.3%)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임금인상 전망

민간조사기관인 노무행정연구소는 1974년부터 매년 임금교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임금인상에 관한 앙케트조사를 노사 당사자 및 노동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8일 2013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는 2012년 12월10일부터 2013년 1월16일까지 5,653명<sup>2)</sup>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8.97%(응답자 507명)에 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3년의 임금인상 평균예상액은 5,063원으로 예상 인상률은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2013년의 정기승급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의 91.0%와 경영자 측의 83.2%가 '정기승급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2013년 하기 보너스에 관해서는 노사 모두 '2012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각각 52.9%와 6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2년 하기 보너스에 비해 증가한다'라는 응답은 노동조합 측이 19.0%인 데 비해 경영자 측은 7.7%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임금인상에 대한 전망(금액 및 인상률)

(단위:%)

	금액					인상률			
	합계	노동자측	경영자측	전문가		합계	노동자측	경영자측	전문가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엔대	0.4			1.3	1.0% 미만	1.6	1	1.4	2.6
2,000엔대	1.2	1	1.4	1.3	1.0~1.1%	10.1	8.6	10.5	11.7
3,000엔대	10.8	10	10.5	12.3	1.2~1.3%	2.8	5.2		1.9
4,000엔대	10.3	12.4	11.9	5.8	1.4~1.5%	7.1	8.1	6.3	6.5
5,000엔대	55.0	54.3	58	53.2	1.6~1.7%	39.6	41.4	47.6	29.9
6,000엔대	11.8	11.4	7.7	16.2	1.8~1.9%	18.9	15.7	16.8	25.3
7,000엔대	1.2	1	0.7	1.9	2.0~2.1%	9.1	8.6	6.3	12.3
8,000엔대	0.4	1			2.2~2.3%	1	1.4	1.4	
무응답	8.9	9	9.8	7.8	2.4% 이상	1	1		1.9
					무응답	8.9	9	9.8	7.8
평균(엔)	5,063	5,077	5,015	5,086	평균(%)	1.64	1.64	1.62	1.65
최고(엔)	8,034	8,034	7,000	7,725	최고(%)	2.6	2.6	2.2	2.5
최저(엔)	1,500	2,000	2,420	1,500	최저(%)	0.5	0.6	0.8	0.5

자료: 노무행정연구소(2013), 「2013年賃上げの見通し」.

2) 노동조합 측 :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 및 제2부 상장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 등 1,879명.  
 경영자 측 :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 및 제2부 상장기업의 인사 및 노무담당부장 2,001명.  
 노동경제분야의 전문가 : 주요 보도기관의 논설위원, 해설위원, 대학교수, 노동경제관련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 1,773명.

## 노사관계

### 춘투(춘계임금교섭)시작

렌고(연합:連合) 회장과 게이단렌(경단련:經團連) 회장이 29일 도쿄 오오테마치의 게이단렌회관에서 회동함에 따라 2013년 춘투가 시작되었다.

이번 춘투에서 렌고는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정기승급의 확보와 함께,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액 1% 인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게이단렌은 정기승급을 연기하거나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렌고의 고가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은,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춘계노사협상의 결과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자사(自社)라고 하는 미시경제 레벨을 넘어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임금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게이단렌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은 “자사의 존속과 발전, 고용 유지 및 안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사간에 위기감을 바르게 공유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2013년 춘투에서 정기승급과 함께 다루어질 또 하나의 커다란 테마로 65세까지의 재고용을 들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4월부터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이 기업에 의무화되게 된다. 재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인식은 일치하고 있는데, 기업의 경우 65세까지 종업원의 임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남아 있는 과제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춘투는 앞으로 주요 노조가 2월 중에 요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대기업의 회답이 집중하는 3월 중순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 렌고의 춘투관련 방침

춘투와 관련하여 렌고는 2013년 춘투에서 ‘일하는 것을 축으로 하는 안심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최저임금의 인상,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균등 및 균형처우, 취업률

3) 요미우리신문 석간 1면, 12면, 2013. 1. 29, 「デフレ脱却、給与1%増要求」.

항상에 연결되는 직업훈련 및 취로지원, 일과 삶의 조화 추진 등 디센트 워크(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임금인상을 요구

#### (a) 월례임금<sup>4)</sup>

- 임금커브 유지분을 확보하고 소득과 생활수준의 저하 방지. 저하한 임금수준의 중기적인 복원 및 격차 시정, 시스템의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 추진
- 규모 간 격차와 남여 간 격차의 실태 파악과 시정,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 간의 균형 및 균등 처우의 실현을 위해 개별기업의 임금수준을 중시한 대책 추진
- 임금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조직의 지도하에 제도의 확립 및 정비를 위한 대책 강화. 렌고가 지향하는 1세/1년 차에 대한 사회적 수준인 5,000엔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의 유지 도모

#### (b) 기업 내 최저임금

- 모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 내 최저임금 협정에 대한 체결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수준 인상

#### (c) 일시금

- 월례임금수준을 중요시하면서, 연간수입을 확보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관점을 포함한 일시금 수준의 향상 및 확보 주장

###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시정

- 중소기업(中小共闘)과 힘을 합쳐, 격차 시정,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 강화

4) 소정 내 임금과 소정 외 임금의 합.

- 2013년 중소기업에 의한 최저도달 임금수준(월)

30세 : 190,000엔

35세 : 210,000엔

### ③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법령의 철저한 준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노동조합이 대책 강구
- 파트타임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대책 전개
-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중점항목을 기본으로, 정규직 사원으로서의 전환 규칙을 명확화 · 도입 · 추진
- 균형 및 균형 처우를 위한 시급 인상을 추진, 복리후생전반,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책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 전개

#### 【중점항목】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균등 및 균형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현상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

- 정사원으로서의 전환 규칙의 명확화 · 도입 · 촉진
- 무기노동계약으로서의 전환 촉진

#### 〈개정 노동계약법을 고려한 균등하고 균형적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

- 승급 규칙의 명확화
- 일시금의 지급
- 정사원과 같은 시간외 할증을 적용
- 무기계약 전환 후 균등하고 균형적인 처우 확보

- 복리후생 전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책
-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 ④ 직장내 남녀평등 실현

2007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정착 및 점검을 위해 적극적 조치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전개

- 배치나 직무내용 등에 있어서 남녀 간의 편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시정
- 승진 및 승격 등 기준의 운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남녀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결과와 원인을 검정하여 시정
-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고 시정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이 보증된 상태인지 검증

#### ⑤ 일과 삶의 조화 실현

##### (a) 실근로시간의 단축

- 렌고 중기 시간단축 방침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전개
  - 연간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조합은 2,000시간 이하로 조정
  - 연간유급휴가의 초년도 부여일수를 15일 이상으로 하고, 유급휴가 취득일수가 낮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을 장려
- 근로시간규제에 대한 대책(36협정의 점검, 적정화 등의 실시, 근로시간 사이의 휴게시간 규제 등)과 과중근로에 대한 대책 실시
- 시간외근무에 대한 할증률 인상
  - 시간외근무가 월 45시간 이하인 경우: 30% 이상
  - 시간외근무가 월 45시간 이하인 경우: 50% 이상(대상기간이 3개월을 넘은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는 월 42시간을 넘을 경우 50% 이상)
  - 휴일: 50% 이상
  - 노동기준법 제138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주의 경우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할증임금률(50% 이상)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일반사업주와 동일한 수준

에서 노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

(b) 양립지원의 촉진(육아·개호휴업법,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 2009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의 주지 및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양립 지원책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이를 개선한 노동협약 개정을 실시
- 임신부보호제도와 모성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주지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임신·출산 및 이와 관련된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 개정육아·개호휴업법의 정착을 위한 대책 실시

⑥ 근무규칙(워크룰)에 대한 대책 실시

-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철저
- 개정 노동자파견법에 관한 대책 실시
-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과 관련된 대책 실시
- 개정 노동계약법과 관련된 대책 실시
- 쾌적한 직장환경 만들기

⑦ 모든 노동조합이 실시할 과제(미니멈 운동의 과제)

모든 노동조합이 실시할 과제로서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을 미니멈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여 노동조합운동의 구심력을 높임과 동시에 교섭결과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개

- 임금제도의 확립 및 정비
- 임금커브 유지분의 명시와 확보
- 비정규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처우 개선
- 기업 내 최저임금협정의 체결확대와 수준 인상
- 산업의 실태를 고려한 총 실근로시간의 단축,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 인상 등



## ■ 결론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여, 엔저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투자가들에 의한 주식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의 1월 매매대금은 37조 8,784억 엔으로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닛케이평균주가(225종)는 중의원 해산이 결정된 작년 11월 14일 이후, 1월 31일까지 28%나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이 31일에 공표한 12월 광공업생산지수(속보치, 2005년=100, 계절조정치)는 11월보다 2.5% 상승한 88.9를 기록하였으며, 2월과 3월에도 각각 2.6%와 2.3%씩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엔저로 인해 자동차·전자 등 수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플러스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이 확대되고 기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후속적인 조치로 고용창출 및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어느 정도를 고용창출 및 확대에 투자할지는 미지수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창출보다 과거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내부유보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3년에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하에서 임금인상이 실현될지 또 실현되면 어느 정도 실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진행되고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의 저하와 소비 감소에 연결되어 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정부의 경기대책이 일본기업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KLI**